

# 경향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11면 사회

## 경총의 ‘21세기형 내선일체’

### 기자 메모

일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영계는 이미 전략을 찾은 듯하다. 규제정책에서는 일본과 동일한 체제를 갖자는 이른바 21세기형 ‘내선일체’다.

이틀 전 정부에 유연근로제 확대를 건의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의 한국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일본 수준으로 노동·환경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일본의 화학물질 규제와 한국의 규제를 집중비교했다.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은 신고가 면제되니 한국도 면제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기업이 연구개발용이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을 면제해주고 있다. 경총이 요구하는 것은 연구개발용 물질 인지 확인도 하지 말고 면제해달라는 얘기다.

경총은 한국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일본 등 외국보다 강하다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 100kg을 제조·수입하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연간 1t 이상 물질을 등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열핏 그럴싸 해보이지만 일본은 제조·수입량이 아니라 환경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단순 비교가 안된다.

앞서 경총은 유연근로제 확대 건의를 내놓을 때도 일본에만 존재하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등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도입되면 사무직 다수가 실제 근무시간 측정 없이 일하게 돼 사실상 주52시간제가 무력화된다.

일본식 제도 베끼기로 극일하자는 경총의 어이 없는 주장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은 규제당국의 태도 때문이다. 이날도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천안의 반도체 업체를 방문해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약속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외교난맥상을 두고, 노동시간과 안전규제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 대책으로 온당한지 묻고 싶다.

이효상 | 정책사회부

hslee@

kyunghyang.com



# 경향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10면 사회

##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 대법 “복리후생에 불과” 폐기환송

전원합의체 8명 다수의견 내  
“기업 수당 회피에 악용 우려”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매년 받아 물건 구매에 쓰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폐기환송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2008년부터 매년 130만~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한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서울의료원 측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

함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2013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4명도 반대의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복지포인트는 1년 안에 소멸하고 양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이들은 “복지포인트 지급 전제인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보전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도입됐다”고도 했다.

퇴직금과 각종 복지수당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통상임금 범위가 줄어들수록 퇴직금과 복지수당도 적게 지급된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앞으로 사용자는 복지포인트로 퇴직금과 복지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도 임금 대신 복지포인트나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 사의 밝힌 문성현 연임… 2기 경사노위 이끌듯

### 박태주 상임위원은 교체 가닥

사회적 대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연임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문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2기 경사노위도 문 위원장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태주 상임위원은 교체가 확정적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학자 출신인 박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차기

상임위원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상임위원 위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 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에 반대해 경사노위를 식물 상태로 빠뜨렸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은 해촉된다.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위원 3명을 추천하면 2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경향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10면 사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이 22일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기고

##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부장

2018년 8월22일 경기 김포시 건설현장에서 한 사람이 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간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그 해 9월10일 끝내 사망했다. 그의 이름은 '딴저테이', 미안마 출신 미등록체류자였다.

사망 당시 25세였던 이 청년은 2013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고, 2018년 3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미등록체류자 신분이 됐다. 사고 당일 건설현장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그는 미등록체류자를 단속하던 법무부 단속반원에게 쫓겨 도주하다 7.5m 아래 '101동 외벽 지하주차장 흙막이 구역'으로 추락

해 의식을 잃었다. 딴저테이의 아버지는 사고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왔고, 아들의 장기를 한국인 4명에게 기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사망사건을 적권으로 조사하여 지난 2월13일 그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단속반원들은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식당으로 난입했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웠다. 미등록체류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일단 수갑부터 채우고 바닥에 앉게 한 뒤에야 신원을 확인했다. 단속된 외국인들은 버스에서 대기하면서 긴급보호서와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할 때에도 수갑을 차고 있어야했다. 출입국관리소까지 이동하는 6시간 동안도 수갑에 묶여 있어야 했다.

현장의 단속반원 전원은 딴저테이가 추

락한 사실을 알았지만 119구조대에 신고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채증하거나 단속을 계속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 지점으로 내려가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관계자징계 △인멸사고 예방과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세부 단속지침 마련 △유사한 안전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제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토키몰이식, 폭력적 단속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관계자 징계도,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재발방지 대책도 없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과정에서 미등록체류자 9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부상했다. 토키몰이, 강압적 방식에 의한 단속으로 매년 이주노동자가 추락하여 숨거나 다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대책도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등록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강제퇴거를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프랑스와 카나다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생명과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가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등록체류자를 수갑을 채워 추방해야 할, 적법절차는 깡그리 무시해도 좋은 '단속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으로 자본은 이윤을 얻고, 국가는 세금을 걷지만 이들

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부끄러운 조국,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가족과 신변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연일 홍수를 이루지만 정작 인사청문회에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딴저테이의 죽음에 대해 정중한 애도를 듣고 싶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하겠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토키몰이식 단속과 차별대신에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듣고 싶다. 더 이상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말을 꼭 듣고 싶다.

## 경향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08면 종합

## 불경기 → 일자리 감소 → 저소득층 소득 감소 → 빈익빈 부익부

## 2분기 가계동향조사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계소득 격차가 5.3배를 기록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정부가 표용성장을 기조로 내세우며 재정을 투입해 각종 일자리 사업과 재분배 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막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균등화 처분기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격차는 5.3배 벌어졌다.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른 반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년 전에 비해 0.04% 늘어나며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지만 처분기능소득은 1.3% 감소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지 못했다.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폭은 마이너스 15.8%로 지난해 2분기(-15.9%)와 엇비슷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8.38세이며,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29.8%로 1년 전(32.6%)보다 감소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 2분

## 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 증감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 중 일부가 1분위로 하락한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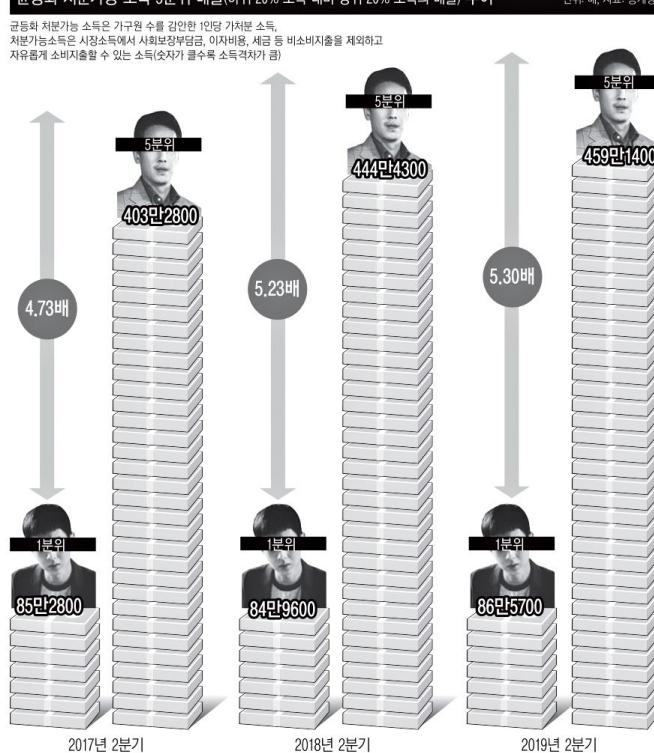
정부 지원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도 충분하지 않았다. 소득에서 연금·사회수혜금(아동수당 등·실업급여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2% 증가했다. 소득수준 별로 보면 증가율이 소득 상위 20%인 5분위(40.5%)가 1분위(33.5%)보다 높았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기여도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이 가장 크고 증가율은 사회수혜금이 큰데, 개인별 수혜 현황을 보면 국민·공무원연금은 5분위, 기초연금은 1분위, 아동수당은 2~4분위, 실업급여는 전 계층에서 수혜율이 높았다"며 "이에 따라 고소득층인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수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1분위 처분기능소득감소에는 소득이 늘지 않은 것 외에도 비소비지출의 증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분기 이자,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전체 가구 월평균 102만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8.3% 증가했다. 하지만 1분위 가구는 10%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자녀용돈 등 가구간 이전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kyunghyang.com

## 균등화 처분기능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배율) 추이



# ‘하청노조 파괴’ 현대차 임직원 징역형 집유… 노동계 “솜방망이”

법원, 노사관계 개입 원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첫 유죄’ 판결  
유성기업 노조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실형 내렸어야” 비판

현대자동차 소속 임직원들이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우감을 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흥

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 선고를 받았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우감을 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흥

행유 2년(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흥판사는 “검찰의 공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중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 등 유죄를 선고받은 현대

차 직원들은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결품사

태 재발 방지를 위해 유성기업이 제

공한 생산 안정화 계획 등을 살펴본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장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

봉사 80시간), 권모 현대차 엔진부

품개발팀 대리에게 징역 6월에 집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뒤 유성기업에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하면서 제1노조(금속노조 산하)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씨는 제2

노조 조합원 가입 속도가 더디자

2011년 9월 부하 직원에게 “신규노

조 가입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점검하고, 9월 20일까지

220명, 9월 30일 250명, 10월 10일까

지 290명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또 황씨와 강씨 등은 2011년 9월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해 10월 8일 유

성기업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성노조 조합원수가 (총원의) 80

% 이상을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취지의 자료를 현대차에

제출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 원청업체가

부품업체의 노조파괴에 개입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부당노동행위를 지지·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안정적으로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성기업 즉 자료를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해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가 아니라 솔깃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직원들은 재판 내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었다”며 “이들은 반성 없을 뿐더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적도 없었는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와 유성

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

명을 통해 “현대차가 부품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에 대해 처음으로 그 죄를 인정한 판

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도 “실형을 내려야 하는 명백한 사

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와 유성

기업에 대해 “노조파괴 행위를 중

단하고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순재·김지환·정대연 기자

sjkwon@kyunghyang.com

## 경향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31면 오피니언

###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실 드러난 글로벌기업 현대차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흥성우판사는 22일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현대자동차 최모 실장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한 해 매출이 10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하는 글로벌기업이다. 그런 기업의 직원들이 하청 기업의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유성기업 사태는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주간 2교대제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회사 측이 직장 폐쇄·용역 깅파 테러로 맞선 사건이다. 회사 측은 기존 노조 파괴를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제2노조(어용노조)까지 만들어 온갖 공작을 벌였다. 이 사태로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4명이 직장을 잃었다. 노동자 수백 명이 용역 깅파들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으며, 조합원들은 사측의 고소·고발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현대차는 당시 유성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도록 도왔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차는 어용노조의 조합원 확대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기존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 유성기업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한다. 이런 일을 국내 최고 재벌그룹인 현대차가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대한 수사 관행은 달라져야 한다. 검찰은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를 2012년 말 창조컨설팅·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e메일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실 확인이 안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로 2016년 3월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빚어졌다. 현대차 직원들이 법원의 단죄를 받게 된 것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정신청과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다시 고소했기 때문이다. 수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최소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정의구현의 보루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이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노동 존중사회’는 불가능하고 노동권·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새겨야 한다.

## 한국 온 GM 해외사업 사장 “전 직원 힘 합치자”

부평·창원공장 노조 집행부 면담  
파업 장기화 막으려 본사도 나서  
노조 “28일까지 임업-특근 거부”

제너럴모터스(GM)의 줄리언 블리셋 해외사업부문 사장(사진)이 한국을 찾아 부평·창원공장 노동조합 집행부와 면담했다. 지난해 6000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GM이 신차 출시로 반등을 노리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GM 본사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노조는 23일에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한국GM은 블리셋 사장이 방한해 한국 GM 임직원들에게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회

사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한 팀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블리셋 사장은 GM에서 북미와 중국을 제외한 해외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21일 인천 부평공장에 이어 22일에는 경남 창원공장을 찾아 신축 중인 도장공장을 둘러보고 직원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가 한국 사업장에서 꾸준히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로, 전 임직원이 힘을 합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블리셋 사장은 부평·창원공장에서 노조 집행부와도 별도로 면담하고 원만한 노사 합의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말 한국을 찾아 지난해 확정한 미



래 계획에 따라 회사가 한 약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데 이어 두 달 만에 한국을 찾아 노조와의 대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말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20, 21일 부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회사와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기본급 인상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쟁의 행위대책위원회를 열고 28일까지 임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한편 23일에는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국민일보

### 실적 압박에… 자동차업계 하투 ‘정중동’

한국GM 사측, 파업 막기 총력전  
현대차, 전면전서 한 발 물러서  
쌍용차, 서둘러 임단협 마무리

자동차업계의 하투(夏鬪)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 무역 환경이 악화된 데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 따라 업체마다 실적 압박이 커 노사가 서로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GM은 노동조합이 지난 20~21일 부분파업을 벌이고 22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파업을 막기 위한 사측의 달래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해외사업부문 줄리언 블리셋(사진) 사장은 이날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방문해 한국 사업장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견고하고 수익성 있는 미래를 위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면서 “이제는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며



이는 전 임직원이 힘을 합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블리셋 사장이 지난 6월 말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해 직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최근의 파업 분위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블리셋 사장이 노조 측과도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본사에서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던 지난 13일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로베르토 럼펠 GM테크니컬센터 코리

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팀장 및 임원, 현장 관리자 등 500명을 모아놓고 회사의 경영 현황을 설명하는 긴급 미팅을 갖기도 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경영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면파업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중앙쟁의대위원회를 열었지만 총파업 대신 이틀간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노사 집중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영 악화로 평택공장 생산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임원 감축에 나선 쌍용자동차 노사는 서둘러 2019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생존 경영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임 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 “정규직 전환하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 돌입

〈파견·용역 노동자〉

서울대·부산대·경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 혼잡·전화 예약 중단  
학교 비정규직도 재파업 경고

전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청소·주차 등에서 혼잡이 벌어졌고, 일부 병원에선 전화 진료 예약이 중단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

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3개 산별 연맹 무기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휴지조각이 됐다”며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부 방침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대병

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5곳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쟁의권을 얻지 못한 경상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8곳은 비번·휴가를 내고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직종은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직 분야다.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우리의 정규직 전환은 제로”라며 “임금 척추와 차별대우, 갑질과 횡포,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있

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공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진료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청소·주차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잡이 빚어졌다.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파업 여파로 전화 진료 예약이 중단됐다.

국립대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자회사 설립 방식이 기존 파견·용역업체와 본질

적으로 다르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립대병원장회의를 비공개로 소집해 “정규직 전환 시 기급적 직접 고용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병원 측은 이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지난달 초 사흘간 파업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재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파업 이후 한 차례 본교섭에 이어 세 차례 실무교섭 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모규업 기자 hirte@kmib.co.kr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5곳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쟁의권을 얻지 못한 다른 국립대병원 8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번·휴가를 내고 총파업에 참여했다.

최종학 기자

# 한해 파업 근로손실 韓 43.4일 vs 日 0.2일

〈근로자 1000명당〉



## 한일 대체근로 비교

한국	금지규정 유무	주요 판례 요지
	노조법 제43조, 파견법 제16조에 따라 쟁의 기간 중 채용 및 대체, 도급 및 하도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업 참가자 업무를 대체하려는 의도로 쟁의 전에 근로자 신규 채용은 위법 (대판 2000.11.28.)</li> <li>자연 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은 쟁의 기간 중 이뤄지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 (대판 2008.11.13.)</li> </ul>
일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업 중 조업의 자유 인정 (아사히신문사 판례, 1949) (산요전기케도 판례, 1978)</li> <li>파업 중 다른 노동력 사용 인정 (메구로제작소 본사 공장 판례, 1961)</li> <li>파업 중 임시고용 인정 (우베흥산 판례, 1951)</li> <li>직장폐쇄 중에도 조업 자유 인정 (니시닛폰신문 판례, 1965)</li> </ul>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커버스토리

### 대체근로 허용 여부에 217배 차이

한국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연간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일본과 비교해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손실이 크다는 의미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2016년 10년 동안 쟁의행위로 인한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평균 43.4일,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 韓 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십각한 수준

日, 韓과 달리 대체근로 금지 안해  
파업에도 ‘공장 올스톱’ 거의 없어

### 재계 “노조에 대항할 수단 있어야”

것을 말한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수치를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해 사용한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한경연 측은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만큼 파업 일수가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주로 파업 건수가 많기보다 대기업 대규모 노조가 장기 파업을 벌여 근로손실일수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106.6일로 10년 평균치의 두 배가 넘었는데 당시 철도노조의 74일 장기파업, 현대차 노조의 대규모 파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조선업계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누적 적자가 쌓인 한국GM 노조도 최근 단체협약 관련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 ●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대체근로 허용 여부’

왜 노조가입률이 더 낮은 한국이 일본보다 파업 일수가 길까. 한경연은 한국 특유의 갈등적 노사문화뿐 아니라 쉽게 파업을 감행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조항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 하도급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여름철 어여쁜 수리 성수기에 파업을 벌였지만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회사 몫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체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쟁의행위를 할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한경연이 이정 한국외국어 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파업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에 조업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쌓이면서 대체근로 허용이 정착됐다. 1949년 아사히신문사 파업 사태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동시에 사용자는 파업 기간 중에 업무를 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파업 참가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에 대항해 자기 스스로 업무의 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달라”

재계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며 오랫동안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해 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며 노조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유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이 교수도 보고서에서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중의 업무 수행을 근로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수단’으로 이해한다”며 “그 대신 파업 참여 근로자에겐 직장 복귀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제한하면서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법원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된다”

## 반도체 사업장은 영업비밀 삼성전자측 손 들어줘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중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관련 정보 공개를 명령한 것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부서·공정·단위작업장소 관련 정보

가 공개될 경우 원고(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측정 결과 보고서의 부서와 공정면, 단위작업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 공장의 레이아웃 관련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중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

사와 한 종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해 3월 19일(구미·온양 반도체 공장)과 20일(기흥·화성·평택공장)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부분 공개가 ‘영업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홍구 기자

## 서울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06면 종합

# 경총 “화학물질 규제 완화해달라” 정부에 건의

## 건의 과제 27건 기재부·환경부 등 제출 소재·부품 산업 구조적 취약성 개선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22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국의 화학물질 규제 강도가 유럽연합(EU) 수준을 능가한다는 산업계 지적에 환경부가 반대 견해를 밝히던 와중에 경총이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별한 건의과제는 27건에 달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면서 “현시점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

주요 국가 화학물질 평가제도				
	신규물질 (연간)	신규물질 시험자료	신고 대상	주무부처
한국 <b>화평법</b>	100kg 이상	최대 47개	신규, 기존	환경부
EU <b>REACH</b>	1톤 이상	최대 61개	신규, 기존	집행위원회 (기업·환경총국)
미국 <b>TSCA</b>	10톤 이상	필수 의무형목없이 기업보유자료 제출	신규	환경보호청 (EPA)
일본 <b>화심법</b>	1톤 이상	정부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신규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학물질 규제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말한다.

건의 과제 27건엔 ▲연구개발 저해 규제의 개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 기준 적용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총은 “우리나라의 신

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00kg으로 연간 1t(1000kg)인 일본이나 EU, 연간 10t인 미국보다 강한 규제”라면서 “외국 기준을 감안해 신규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t 이상으로 높이거나 100kg 이상~1t 미만인 경우 간이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화학물질 규제가 EU보다 더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설명자료 등에서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47개의 시험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최소 22~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실제 규제 내용 중엔 EU보다 강한 경우도 있고 환경부지적대로 완화된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기업의 체감도”라면서 “기업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지 확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EU 시스템과 다르게 우리 정부는 기업이 어렵다고 해도 개별 법 조문을 다시 설명하며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등 소통이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흥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첫 판결

노동자 548명 서울의료원 상대 패소

계류 중인 관련 20건에도 영향 미칠 듯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던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복지포인트가 쟁점에 포함된 사건이 대법원에만 20건 정도 계류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8명의 다수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선택적 복지 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내 복리후생과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기업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1항은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 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원심이)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배정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며 별개 의견(파기환송)을 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선택적 복지 제도를 규율하기 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며 “선택적 복지 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상고기각)을 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의료원이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수당을 지급하자 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성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dream@seoul.co.kr

## 소득격차 최악, 내수 진작 등 보완책 내야

지난 2분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기 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최상위층인 5분위는 942만 6000원으로 3.2% 늘어났다.

큰 문제는 저소득층 소득의 구성이 나빠진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감소했는데, 이를 상쇄한 것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으로 무려 33.5%가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즉 1분위의 소득이 그나마 유지된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이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일 뿐 실질소득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 1분위에서

사업소득이 15.8% 증가했는데, 이 역시 나쁜 신호다. 서민층(2, 3분위)으로 분류됐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인 1분위로 대거 추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1분위 소득이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적부조에 힘써야 한다. '3050클럽' 국가에서 굶어 죽는 주민이나 와서야 되겠는가.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제 도를 대기업에서 운용해 보니 '저녁이 있는 삶'은 연간 수백만원의 임금 손실과 연결됐다. 현재 월급 구조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구성된 탓이다. 경기 부진에 고스란히 노출될 영세자영업자와 실질임금 하락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나쁜 대외 경제환경 탓보다는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토건족'으로 평화된 건설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오른다

### 月 500만원 소득자 年 6만원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6.46%)보다 3.2% 인상된 6.67%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는 건보료율을 3.49%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9%까지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구간 사이에서 건보료율 인상 수준이 결정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으로 월급 500만 원(세전)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내는 건

강보험료율이 16만 1500원에서 16만 6750원으로 5250원 오른다. 1년으로 봤을 때는 6만원 넘게 오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건보료율은 전해에 비해 2.04%, 올해 건보료율은 3.49% 인상됐다. 이번에는 3.2%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건보료율이 최대 1.7% 인상됐고, 2017년 건보료율은 동결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총은 "경영계에서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말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정부가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건보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복지부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 건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했다.

정부는 "건보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그와 동시에 부정 수급을 걸러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여파로 건보 지출이 늘어 2026년이면 건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흥준기 기자

# 최저임금 29% 뛸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29% 줄었다 〈소득하위 20%〉

일자리 못구해 소득 급감  
소득주도성장 2년의 역설  
정부 지원금은 10% 올라

소득 하위 20% 가구가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2년 전에 비해 17만6871원(28.7%) 줄었다. 소득 주도 성장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는 동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29% 감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했었다. 이어 며칠 뒤엔 “최저 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을 바꾸며 ‘소득 주도 성장’ 강행을 선언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 뒷걸음치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562원 늘었다.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진 소득 감소세가 멎쳤지만, 이는 일해서 돈을 더 번 게 아니라 공적연금·기초연금과 같은 ‘이전(移轉)소득’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1분위 가구의 지

난 2분기 월평균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9.7%나 늘어난 65만2100원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저소득층의 주머니 사정은 심각하다.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작년보다 15.3% 줄었는데 벌써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장 기간 마이너스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일자리를 쏟아내는데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과장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가구에서는 큰 폭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자섭·신수지 기자 A10면에 계속

## 경향신문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031면 오피니언

### 더 벌어진 소득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지갑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인 균등화가처분소득의 감소다. 이 기간 중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3% 줄었다.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에 달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로,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호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와 많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

황이 됐다. 정부로서는 빼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호 사업’으로 꼽은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다.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7월 고용현황을 보면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했지만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37만7000명)가 많았다. 반면 30·40대 일자리는 20만개가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民間에서 만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효과가 있다. 소득과 일자리 대책은 다른 경제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다. 즉 투자·수출·내수활성화와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결과물로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주지하듯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민간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한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과 정부에서 협력할 때 소득격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누누이 지적된 대목이다. 필요한 것은 정책을 현실화하는 실행력에 있다.

# 하위 20% 가구 소득만 제자리걸음… 양극화 ‘역대 최악’

## 통계청, 2분기 가계 소득 동향

올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이 5분기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하지만 온행 이자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가구는 6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다른 소득계층 가구들은 명목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늘어 소득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1관련기사 8면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월 소득 132만원 0.04% 증가 불구  
가처분 소득은 6분기 연속 감소

1·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5.30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

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전국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3.8%

증가했다. 임금 상승의 효과로 근로소

득(316만9100원)은 4.5% 늘어났지만 사

업소득(90만8500원)은 자영업 부진의 영향을 받아 1.8% 감소했다.

이 중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지난해 2분기(132만4900원)보다 0.04%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은 멈췄지만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5.8% 늘었지만 근로소득(43만8700원)이 15.3%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효과를 봤지만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효과를 상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펼쳤지만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 104만 94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어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명목소득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반면 자녀 용돈 등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은 모두 소득이 늘었다.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1만1100원으로 4%, 3분위 가구는 419만4000원으로 6.4%, 4분위 가구는 586만

3000원으로 4%씩 각각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942만6000원)도 3.2%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배율)은 5.30 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23배)보다 올랐다. 특히 이 수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朝鮮日報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A10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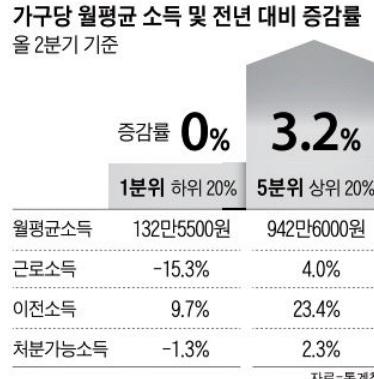
# 저소득층 근로소득 6분기째 감소 소득 양극화, 통계작성 아래 최대

## 2분기 가계동향 조사 A1면에서 계속

세금으로 쥐어짜 낸 단기 일자리 덕에 근로소득이 더 내려가는 것을 그나마 막았다는 얘기다.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주는 돈’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 가구의 경우 지난 2분기 월평균 104만9400원으로 작년보다 1.3%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역시 6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2분기에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15.8%나 증가했는데, 이는 2~3분위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면서 이들의 소득상 지위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1분위 소득은 제자리걸음했지만 5분위 소득은 3.2%나 증가한 942만6000원을 기록했다. 5분위 소득은 지난 1분기(-2.2%)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 이래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심지어 각종 정부 지원금도 고소득층에 쏠리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지난 2분기에 5분위 가구는 전년 대비 29.3%나 늘었는데,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8.8%와 1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당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



##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저소득층 고용 감소에 영향 커”

처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5.30 배로 작년 2분기(5.23배)보다 0.07배나 더 벌어졌다. 2분기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아래 최대치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2분기에도 5분위 배율은 5.24 배였다. 그런데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소득 개선 정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 추진에 힘입어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는 엉뚱한 평가를 내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소득 분배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고용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 “임원 반대” 노동계 반발에 … 광주형 일자리 시동 직후 암초

이사 3명 선임하려던 발기인 총회  
노동계 불참 “현대차 측 인사 불만”

주택·어린이집 등 3000억 필요한데  
70억만 확보… 인프라 구축도 난항

5년 2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광주 자동차공장 법인이 설립 초기부터 빠져 거리고 있다.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표방한 합작법인의 한 축인 노동계가 법인 출범식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22일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 20일 출범식·발기인 총회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 출범식은 완성차공장 착공에 앞서 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법인 설립 후에는 올해 말 공장 착공에 이어 오는 2021년 자동차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당초 광주시는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 법인 명칭과 정관, 대표이사, 임원 등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광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 예정이던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불참했다. 윤 의장은 투자자 자격이 아닌,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초청자 명단에 있었다.

윤 의장은 이날 결정될 3명의 법인 이사 중 2대 주주인 현대차가 추천한 인사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사 표시 차원에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 임원 출신인 이 인사가 “반 노동적 성

향을 갖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윤 의장은 “해당 인사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불참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 인사가 추천되면 퇴진 운동을 하기로 했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는 당초 선임키로 한 이사 3명 중 2명을 뽑지 못했다. 광주시 측은 이날 1대 주주 자격으로 초대 법인 대표이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선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박 대표이

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2명은 다시 추천받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로 2014년 6월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는 5년 2개월 만에 법인설립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광주 자동차공장 설립사업은 빛그린산단에 연 10만 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 1000여 명을 고용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게 된다. 광주 차공장은 노사민정 간 입장차로 인해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법인 출범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사업이 정상화하기까지는 과제가 많다. 지역별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의 중복 투자 문제나 복지 인프라 구축, 노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광주시 안팎에서는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표방하며 전국에 들어서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투자, 과잉 공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발표

된 강원형·군산형·구미형·울산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부문에 집중돼 있어서다. 지역 노동계 역시 울산, 구미 등에 수천억원 규모의 친환경 차 생산·부품공장이 들어설 경우 광주 공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공장 근로자의 복지 인프라 구축도 난관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지원책인 행복·임대 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자금은 3000억원 규모지만, 현재 광주시는 70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합작법인의 근무 조건이나 노사 문제 등을 모두 노사 민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일부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시대적 사명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 한국일보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A13면 사회

### 학교 비정규직 연대 “교육당국 시간 끌기” 10월 2차 파업 예고

지난달 초 3일간 총파업을 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교섭에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육당국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등 당국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지난 한 달여간 꾸준히 수정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파업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교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와 교육감들은 (7월) 총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권한이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7월초 총파업 이후 7월 16일 한 차례 본 교섭에 이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세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파업 당시부터 요구한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최초 제시한 기본급 1.8% 인상 외에 모든 직종에 같은 수당(월 6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래에 수당을 받던 직종인 영양사 등은 다른 직종과 같은 액수로 1만~2만원 가량 수당이 인상된다. 교육당국은 종래에 지급하던 교통비(월 6만원)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기본급 1.8% 인상은 기본적인 공무원 평균임금인상을 데다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겠다는 ‘조삼모사’ 제시안”이라며 “더 강력한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 노조활동에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5월21일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직원 첫 유죄

**법원, 4명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청의 하청사 노사관계 개입 확인  
유성 노조 “형량 너무 낮다” 반발**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원청업체가 부품 납품업체의 노사 관계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이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다. 완성차 업체가 부품사 노조활동에 개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2일 유성기업의 노조(금속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최아무개 과장에게 징역 1년, 같은 회사 엔진부품개발팀 황아무개 팀장, 강아무개 차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 권아무개 대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한 이들에게 60~12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판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정상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재판에 넘김)하면서 “현대자동차는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노조(유성노조)가 설립되자 (그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유성기업 사쪽으로부터 노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최과장 등은 제2노조의 조합원 모집 실적이 부진하자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질책하는 내용을 유성기업에 전하는 등 노조파괴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11년 9월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다음달인 10월8일 현대자동차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제2노조 조합원 수가 80%를 넘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현대차 직원들은 “유성기업 노사 관계에 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결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유성기업이 제공한 생산안정화 계획 등을 살펴본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그동안 사쪽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가 당한 고통과 희생에 비해 이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 10명 중 9명 다시 실업자로 … 청년 일자리 사업은 ‘밀빠진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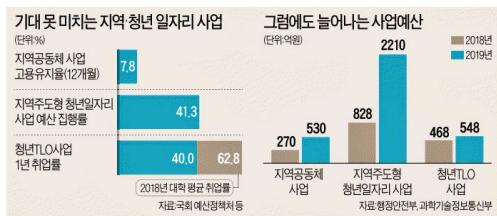
## ① ‘미래 준비’ 안되는 청년·지역 일자리

7.8%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이후 1년간 취업 유지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100명 중 8명만 사업 참가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재정 지원이 끝어지자 다시 실업자로 됐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역사회와 청년층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은民間 분야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공공부문인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규모와 정부 예산만 커지고 있다. 경력 쌓기와는 무관한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만 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거리 청소·화단 가꾸기 등 단순근로 … 재취업 연결 안돼

청년TLO 사업 취업률 40% … 대학 평균 취업률 62% 밀돌아

저조한 성과에도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 ‘관리 사각지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청출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총간사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07@hankyung.com

### ◆ 실제와 반대로 간 예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주당 30시간씩 최대 6개월까지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모두 대로 기초자치체가 정한 사업 분야에서 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시적으로 도입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전환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가 작성한 ‘2019년 시·도별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을 보면 재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전체 1517개 사업 중 7487개가 거리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 단순한 노역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정비, 전통문화 해설 배우기 등 직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많은 사업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계속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 들어 사업을 계속 죽여온다. 한때 수천억 원에 달했던 예산이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210억원으로 저점

을 찍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70억원, 올해는 추

가경쟁예산까지 포함해 530억원으로 늘었다. 국비만 반영된 것으로 지자체 예산

까지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1만 4000명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저조한 성과에도 오히려 예산이 급증

되며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답이

외에는 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참가자의 재취업률을 높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청년일자리 사업도 낙제점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올해 344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2만2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829억원 예산 가운데 41.3%인 342억원 만 집행했다. 참가자 상당수가 약속된 2년

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새

계 인력을 쓸 기회로 여기는 재용기관의 간

극을 정부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해 11월 부산에서는 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

청년일자리로 재용된 청년들을 당초 약

속한 것과 다른 값거나 상품 판매에 동원해

지역 청년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시작

한 ‘청년TLO기술이전단체인력’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다. 청년TLO 사업은 총

후 직장을 잡지 못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대학의 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높인 뒤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4000명에게 6개월 동안 158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의 일자리 수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1년간 청년TLO 과정을 거친 이들의 취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8%에 그쳤다. 2018년 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낮다. 대학 실험실 등에서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업 참여 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하며 수당을 받았다” “연구실 담당 교수님이 취업 공부나 하라고 하더라”

는 등의 참여 후기가 있다. 고공 행진하는 청년실업률 지표를 끌어내리려고 면밀한 조사 없이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업자 수가 걱정되니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오감 데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민간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한국일보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A13면 사회

# “청소 파업 해결해야 비행기 제 시간 뜯다”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한 달

192명 “체불임금 10억 달라” 시작  
사측, 노조 간부들 상대로 손배소  
다른 노조는 “힘들다” 갈등 커져

15분 이상 지연 출발 15% 증가해



대한항공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노동자 130여명이 체불임금 지급, 휴게시간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주) 소속이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의 규정(국제선 60분 초과 등)에 따른 지연은 하루 평균 14편 정도로 파업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 하지만, 전체 청소노동자 3분의 1가량이 일손을 놓은 공백이 없을 순 없다.

파업 한 달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파업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보험료, 병원비, 집 대출금 등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200만원 가량 하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결국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정광순(57)씨는 당장 다

(192명·약 10억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케이맨파워(주) 소속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한국공항지부)가 부분파업을 벌였다. 올해 3월까지 진행된 파업에 대해 사측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총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갈등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노조는 결국 소송취하를 요구하며 지난달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인 한국공항은 물론,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태일 노조 지부장은 “파업이 시작한 후 사측과 제대로 대화도 아직 못해봤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3일에는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공항 측은 “하청업체 문제로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과 교섭이 풀린다고 해도 노노갈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케이맨파워(주)의 다른 노동자 200여명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 인천공항캐빈노조(캐빈노조) 측은 장기파업으로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캐빈노조는 8월부터 대표노조가 한국공항지부

에서 자신들로 바뀌었다며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이상 기내 청소를 해 온 캐빈노조 조합원 장옥순(가명·58)씨는 “파업 전에는 두 노조간 사이가 좋지 않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공항지부는 캐빈노조를 ‘여용노조’라고 주장하면서 수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한다.

노사 노노 갈등이 얹혀 있어 교섭을 중재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면 사측의 대체인력 고용이 가능해 업무가 정상화되겠지만, 한국공항지부의 파업은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합법 결론이 나면, 파업 장기화로 항공기 지연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가 해결돼 파업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사 대화의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노노 갈등도 있어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 “일제때 끌려가 강냉이 먹으며 노예같은 삶”

경기도 ‘女근로정신대’ 실태조사

도내 거주 22명 중 10명 인터뷰  
노동조건 등 구체적 피해 기록

“피해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증액·절차 간소화 필요”

“일본인이 버린 음식물쓰레기로 주린 배를 채웠어. 일본 정부의 사과를 꼭 받고 싶어.”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사는 이옥순 씨(88·여)는 어린 시절 일을 떠올리며 감정을 억눌렀다. 이 씨는 현재 북한 지역인 강원 평강 출신으로 열 살이던 1941년 갑자기 고향을 떠나 서울 영등포의 방직공장에 가야 했다. 당시 경찰들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도와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을 강제동원했다.

이 씨는 공장에서 하루 18시간 이상 실을 짚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다시 일본으로 끌려갔다.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강냉이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사소한 의사 소통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격히 통제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는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고,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어릴 때부터 외로운 삶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없애고 싶은 기억”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포천시에 사는 변복순 씨(90·여)도 상황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옥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강제노역 등 과거 피해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이옥순 씨 가족 제공

비슷하다. 충남 대덕군(지금의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 출신으로 열두 살 때 영등포 방직공장에 동원됐다. 당시 열여덟 살이던 언니와 열 살 동생을 대신해 강제동원에 끌려갔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2년 반 동안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광복을 맞았다. 변 씨의 아들 오모 씨(62)는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강제노역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한다”며 “당시 손수레를 끌다 오른

발을 다쳤고 현재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2일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올 3월부터 4개월 간 도내 생존 피해자 22명 중 10명에 대해 연령, 신분, 생활환경, 노동조건, 급여 미지급 등 강제 동원 당시 상황과 구체적 피해 사실 등을 심층 인터뷰했다. 건강 악화, 개인 사정 등으로 12명은 인터뷰에서 제외됐다.

피해 여성 대부분이 현재 80, 90대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로 생활비와 의료비 등 지원금 증액과 지원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1인당 약 30만 원의 생활지원비와 의료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영수증 처리와 후청구 등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나타났다.

도는 또 정부와 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피해자 관련 기금을 출연해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상 규명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피해자들이 2차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등이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권교육 자료를 만드는 등 향후 피해자들의 지원계획 수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